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대주제 세션 (데이터와 젠더: 균형의 실천)

토론 대상 발표문: “기계는 권력의 지도”: 인공지능과 프로그램된 불평등 (이희은,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기계는 권력의 지도”: 인공지능과 프로그램된 불평등>에 대한 토론문

김수정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지난 몇 년간 ‘인공지능’ ‘딥러닝’ ‘빅데이터’ ‘4차혁명’ ‘알고리즘’ ‘핀테크’ ‘블록체인’ ‘바이오테크’ 등과 같은 정보 테크놀로지 용어들은 점차 낯선 뉴스가 아닌 우리의 일상적 언어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 용어들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소수로 보이지만, 무언가 거대한 시대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대중에게 암시하는 기호의 역할은 이미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지 모른다는 느낌, 그런데 정작 그것이 초래하는 것이 무엇일지는 잘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의 깊은 곳으로부터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 불안은 이들 정보 테크놀로지 용어들이 동반하는 과학 기술의 위광과, ‘혁신’과 ‘편리’의 긍정적 수사(rhetoric)들에 압도되어 제대로 심문 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탐색하는 발표자의 “‘기계는 권력의 지도’: 인공지능과 프로그램된 불평등”이라는 제목의 이희은 교수의 글은 매우 반갑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이 글에서 ‘인공지능’ 개념을 둘러싸고 형성된 일종의 ‘신화’를 해체하고, 그 신화가 배제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특히 젠더와 테크놀로지의 관계에서 드러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출현한 역사적 맥락과 부침에 대한 개략적 설명을 통해 인공지능이 객관적인 절대 과학의 성공적 결과물이 아닌 실패를 거듭해온 사회의 ‘구성적 대상’이자 산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특히, ‘빅데이터 처리장치’ 혹은 ‘디지털 데이터 시스템’으로 불려야 마땅한 기술이 ‘인공 지능’이라고 ‘부정확하고’ ‘과도하게 포장’되어 명명됨으로써, 인간의 사고와 판단능력, 그리고 자율적 행위성이라는 인간적 특성을 전유하며 우리를 호도하는 점을 비판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용어가 ‘자본주의 담론’이자 사실상 지난 10여년 동안 ‘연구 지원금과 테크기업들의 수익을 증가시켜주는 마케팅’ 용어에 가까우며, 실제 작동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선택과 편향’을 통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명시적 차별로 이어지는’ 효과를 발생한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한 증거로서, 그는 인공지능 음성인식장치의 여성 목소리 자동 설정, 여성을 ‘가임기라는 데이터로 수렴시켜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침해하는 2016년 정부의 ‘대한민국 출산지도’, 그리고 여성의 바이오 정보를 스스로 추적하고 제출하게 하는 ‘팜테크 산업’의 증가를 제시한다. 그리고 맺음말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새로운 과학기술이 ‘인간 사회의 공유가치를 최대한 구현하고’ ‘이념이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조건이 되어 우리를 진보하는 그런 미래’를 상상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며, 사실상 그것이 우리가 과학기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함을 암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토론자는 이희은 교수의 관점과 주장에 모두 동의한다. 굳이 몇 가지 사족일 수 있는 의견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 알파고와 함께 더욱 대중화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개념의 ‘신화’가 15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그때와 유사한 담론적 내용을 지니고 그러한 효과를 전체적으로 발휘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용어가 이제 어떻게 각 영역에서 활용되고 어떻게 이해되는지는, 권력 관계가 복잡하게 퍼져있는 사회 영역에 따라, 사회적 구성원의 층위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둘째, 인공지능 담론과 과학기술이 권력관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활용되고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목은 중요하지만, 그리고 저자도 일면에서 과학기술의 효용성을 일부 인정하지만,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즉, 기존의 낙관론과 비관론(비판론)의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다.

셋째, 현재의 과학기술이 실제로 자본주의의 생산양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기에 정부의 담론이 단순히 ‘정책홍보’가 아닌 치열한 국가적 차원에서 벌이는 또 다른 생존게임의 수준은 아닌지, 그런 측면에서 논의도 포함하여 확장되었으면 싶다. 즉, 감시와 프라이버시, 불평등이 강화되는 측면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문제가 기업과 정부의 자본주의 게임 속에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생존의 문제로 접합되게 되어 동의를 구축하게 만드는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란다.